선거구 획정 지연… 애타는 후보들

여수, 영암·장흥 등 통·폐합·분구 지역 난감

공천경쟁 구도 불확실…선거전략 마련 못해

국회 정치관계법 특위의 선거구 획정작업이 지연되면서 통·폐합 및 분구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구의 현역의원과 원외 예비 후보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19일부터 공천접수를 시작했으나 합구·분구대상 후보들은 공천경쟁 구도가 불확실해 선거전략을 마련할 수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고, 한나라당도 합구대상 지역은 공천심사를 보류할 것으로 알려져 해당지역 후보들이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국회 선거구획정위가 합구대상으로 제시한 여수 갑·을의 김성곤 의원과 주승용 의원이 당장 난감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

두 사람은 일단 공천을 신청하고 통·폐합을 막기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합구가 되면 공천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다.

김 의원측은 "현 지역구대로 공천을 신청하겠지만 선거를 치르기 위해선 3월 초순까지는 선거구 획정작업이 끝나야 한다"고 밝혔고, 주 의원측은 "여수 갑·을이 합치면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선거공약과 전략을 세부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 장흥·영암, 강진·완도는 더 심각하다. 개편된 선거구가 장흥·영암·강진으로 묶일 지, 영암·강진·완도로 묶일 지가 결정되지 않아서 공천 신청서에 선거전략과 구상을 어떻게 적어넣어야 할 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분구 대상지역도 애매하기는 마찬가지다. 지역구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용인시에는 30여 명의 후보자들이 몰렸지만 선거구 획정이 빨리 이뤄져야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이 지역 출마자들의 입장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합구대상 지역 후보들은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공천심사도 순연되는 등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자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은 "지역주민들도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걱정을 많이 한다. 합구가 되든 안되든 빨리 결정이 돼야 한다"면서 "아직 예비후보 등록도 못하고 공천심사 일정도 늦어지는 등 입장이 어중간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한나라당은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을 반대하니까 비례대표를 줄여 의원정수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선거구획정위가 합구지역으로 제시한 전남 여수, 부산 남구, 대구 달서구 지방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구 축소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획정위안은 어떤 현실적 기준이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졸속안이며 따라서 합구는 원천무효"라며 "국회 정치관계법 특위가 반드시 바로잡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직사회 달라져야 한다"

■ 이 당선인 새정부 첫 워크숍 뭘 언급했나

"작은 정부·효율적 정부, 지자체도 변화 올 것"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9일 "장관들이 새로 부임하면 (공직 사회가) 분명히 지난 10년간 보다는 달라져야 한다"면서 "공직사회의 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 정부 내각 및 대통령실 합동워크숍'에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바꾸려면 아마 사소한 것 같지만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부터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장관의 자리배치, 1급 이상 공직자들의 자리배치에서부터 그런 문화를 글로벌한 기준에 의해 좀 바꿔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당선인의 발언은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정운영 자세와 관련, 이 당선인은 "여러분이 뚜렷한 국정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가고 그 목표대로 공직자들을 끌고나가야 한다"면서 "금년 1년 목표를 세운 뒤 월별 단위당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인터넷 시대라는 것은 사실 분초당 계획을 세워야 맞는 것"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당시에는 국민이 이해를 못 해도 나중에 돌아보면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시대보다 앞서가도 지지를 못 받을 수 있고, 시대보다 뒤처져도 지지를 못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시대를 앞서가는 것이 낫다"고 인수위를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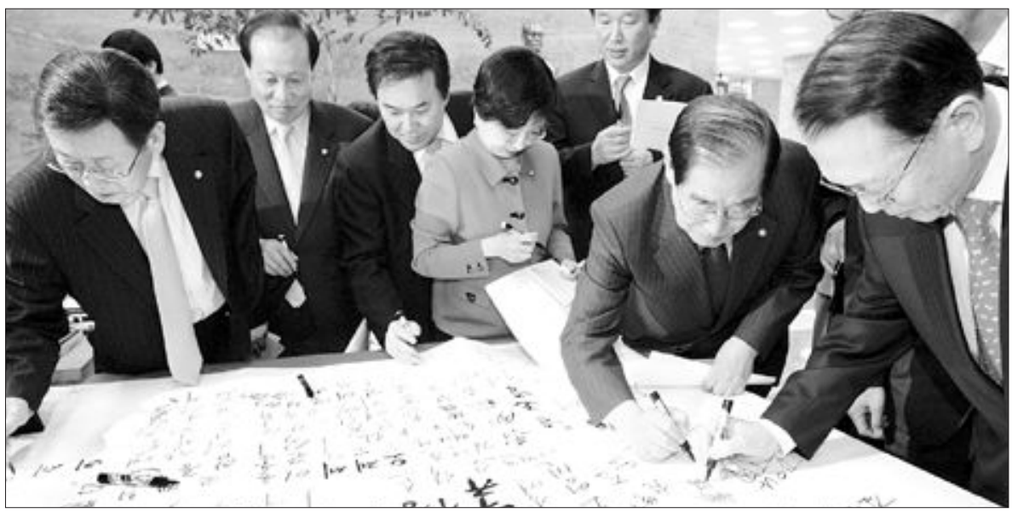
최근 자신과 인수위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데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당선인은 나아가 "정부조직법이 새로 바뀌어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가 되면 아마 뒤이어 16개 시·도도 거기에 맞춰 조직의 변화가 올 것"이라면서 "16개 시·도가 바뀌면 자연히 산하 기초단체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과 관련, "다소 지연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정치권이 잘 타협해 새로운 정부가 잘 나가도록 할 것으로 본다"면서 "여야를 초월해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각 분야의 비효율을 제거해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자는 것이 뚜렷한 목표이기 때문에 국민도 정치권도 이해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밖에 BBK특검 조사에 응한 것에 언급, "대통령이든 대통령 당선자이든 법 아래에 있고 법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법을 안 지키고 예외로 하면 근로자가 사소한 법을 어겼다고 해도 법을 집행할 수가 없다.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 지상목표로, 윗사람은 지키지 않고 하부 노동자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7대 국회의원 필함 제작 19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다홀에서 국회기록보존소 주관으로 열린 '제17대 국회의원 필함(기념서명판)' 제작 행사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기념하기 위해 친필 서명을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승수, 부동산 투기"

서갑원 의원 의혹 제기

통합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19일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그의) 가족은 부동산 투기 붐이 있는 곳마다 투기를 일삼았고, 스톡옵션 등 일부 재산신고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 위원인 서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 후보자는 현대건설의 현대아파트 지구 조성으로 강남개발이 본격 시작된 77년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이사 갔으며, 주택공사가 반포지구에 대단위 아파트 지구를 조성하던 81년에는 강남구 논현동에 대지 467.1㎡, 건평 229.98㎡의 단독주택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형과 함께 송파구 방이동 492.7㎡ 규모의 대지를 공동으로 매입하던 88년은 올림픽 특수로 송파구 일대 개발붐이 일던 시기"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한 "2005년 ㈜오스코텍 사외이사로 취임, 등기임원을 맡으면서 주식 5만주를 스톡옵션으로 받은 뒤 현재까지 보유 중이나 신고하지 않았다"며 "18일 현재 한 후보자가 보유한 스톡옵션의 가치는 1억6천463만 원으로, 국회에 제출한 총 신고재산(21억450만 원) 대비 약 8%가 고의로 누락된 셈"이라고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호남지역 전략공천은 없다"

박상천 통합민주당 공동대표 '여론조사 경선' 시사

박상천 통합민주당 공동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전략공천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호남지역의 공천은 결국 여론조사 경선 등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박상천 대표는 19일 통합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와 만나 "당헌·당규에 전략공천 조항이 있지만 공식적인 전략공천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최고위원회의 등 당 지도부에서 결정하는 전략공천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한, 참여정부에서 주요 요직을 맡았던 예비후보들과 관련, "그 사람이 참여정부의 국정 실패에 관여했느냐가 (공천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참여정부에서 장관을 지냈다고 이득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민주당의 총선 의석 확보 전망에 대해 박 대표는 "국민이 한나라당의 권력독점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수도권에서 의외로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총선에서 100석의 의석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3일 해단 인수위 2개월 성적표는

규제 완화·교육정책 대변화 예고

경제살리기에 최우선 순위…"정책검증·정무기능 보완 필요" 지적도

지난해 12월 26일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는 23일 해단식을 끝으로 숨가쁘게 진행된 두 달 간의 활동을 공식 종료한다.

인수위의 활동은 경제살리기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이 당선인의 의지를 적극 뒷받침하면서 10년만의 '정권교체'를 실감케 하는 핵심정책의 기조 변화까지 담아냈다.

우선 'MB노믹스'로 대표되는 경제분야에서 인수위는 이 당선인의 '비즈니스-프렌들리(business-friendly)'라는 언급처럼 경제살리기와 투자확대를 위해 기업친화적이고 시장중심적 경제정책을 펴나갈 것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꾸준히 보내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대불공단 전봇대' 사건은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완화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에 충분했다.

이런 흐름은 자연스럽게 정부의 몸집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을 키우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의 국정철학으로 연결됐고, 18부4처였던 중앙정부 행정조직을 13부2처로 축소하는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으로 이어졌다.

수능등급제 개선, 교육부의 권한 이관은 '평준화'와 '3불정책'으로 대표되던 그간의 교육 정책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생길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었다.

그러나 잡음도 없지 않았다. 영어공교육 강화방안은 충분한 준비 없이 발표해 영어 사교육을 더욱 부채질한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서민 생계비 인하방안 역시 애초 의욕에 비해 체감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운하 공약은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과정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에 부딪히기도 했다. 역점 추진했던 정부조직 개편안은 통합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조정분과 위원인 박형준 의원은 "대선 공약을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정부조직 개편과 규제개혁을 비롯한 국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설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다만 본의 아니게 과잉활동한 것처럼 비쳐지거나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연합뉴스